

제364회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 국 정 감 사

- 해 양 수 산 부 -

2018. 10. 11(목)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 목 차 ① |||

<빛 좋은 개살구 >

1. 어가소득 5천만원의 그늘..어로와 양식 소득 격차 2배
2. 해수부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장밋빛만 가득한 허상!!
3.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채질하는 수산업경영인사업

<공공기관 해부>

4. 비전문가를 밀실 평가로 '캠코더' 낙하산 인사
5. 방향 잃은 공공기관..국정과제 수행기관인지 알지 못해
6. 지침 위반하여 법인카드 사용 230건에 3,230만원!

<여성 권리 신장>

7.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 탈피해야..여성 권리 신장 필요
8. 여성어업인까지 농업에 차별 대우..전담부서 설치 필요
9. 유명무실 원산지표시위반 공익신고, 허위신고가 절반

<빛 좋은 개살구 1>

1. 어가소득 5천만원의 그늘..어로와 양식 소득 격차 2배

- 해수부는 올해 1월18일,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을 정책과제로 보고함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 ※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의 3가지 정책과제 추진 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②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③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2017년 어가의 평균 소득은 '16년에 비해 4.2% 증가한 4,902만원으로 해수부가 목표로 한 5천만원 시대에 성큼 다가선 것으로 보이며, 축하받을 만한 일은 분명함(표1)
 - 이는 2017년 기준 농가에 비해 28.2%, 임가는 41.7% 높으며, 도시근로자의 80.3%에 해당하는 소득임(2016년 기준)
- 하지만, 어가소득의 증가는 양식어업 소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소득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어가 소득의 증가는 양식어가 소득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결국 어가 소득의 증가는 양식 어가가 이끌고 있는 셈임(표2)
 -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어가 소득은 37.3% 증가했는데 어로어가는 10.6%에 그친 반면, 양식어가는 107.2% 급증함
 - 금액으로는 어로 어가 370만원, 양식어가 4,009만원 증가함

- 이러한 통계적 착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임(표2)
 - 2010년 어로와 양식어가의 소득차이가 24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 2017년에는 소득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소득차이는 3,878만원이고, 특히 양식 어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동해안 어민의 경우 보조금(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식어가와 소득 차이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 예상됨
 - ※ 이전소득 : 비경제적 활동의 경상 수입(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
- 문제는 이러한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어로 어가 보다는 양식 어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표3)
 - 주요 정책 중 참다랑어 출하, 김 양식 규모 확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은 모두 양식 어가의 소득을 더 높일 것이고
 - 명태 자원 회복은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올해 명태 신고 개체수는 6,268마리로, 어로 어가 소득으로 연결하기엔 무리고, 바다모래 비중 축소도 당장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지 못함
-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도시근로자에 비해서도 소득이 적은 것도 불만인데, 어가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면 어로 어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임

- ☞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은 어로 어가들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고서는 실패한 정책,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 그럼 어로 어가 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직불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동해안 어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 그 동안 접경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와 명태전문연구센터 건립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본 의원 또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음
 - ☞ 이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함.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람
- ① 어로 어가 소득 증대 방안과 그 소득 목표
 - ② 동해안 어민 소득 증대(이전 소득)를 위한 접경지역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 범위 확대
 - ③ 명태전문연구센터 건립

(표1) 어가 등 년도별 소득 변동 현황

구분	어가소득	농가소득	임가소득	도시근로자
2017년	49,016	38,239	34,590	미발표
2016년	47,077	37,197	33,585	58,613
2015년	43,895	37,215	32,223	57,800

(표2) 어로 어가와 양식 어가 소득 변동과 비교

(천원)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0년	'10비교
-어가소득	49,016	47,077	43,895	41,015	35,696	37.3%
▪어로어가	38,715	38,021	38,276	37,240	35,006	10.6%
▪양식어가	77,500	71,856	61,390	51,944	37,405	107.2%
어로양식격차	38,785	33,835	23,114	14,704	2,399	
어로양식비중	49.9%	52.9%	62.3%	71.7%	93.6%	

(표3)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을 위한 주요 정책

<p><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을 위한 주요 정책></p> <p>□ 생산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명태 방류 등 명태자원 회복,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 시작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 ○ 김 양식규모 확대 추진,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p>□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직불제 적용범위 쏠도서 확대, 어업용 토지 양도·취득세 감면 ○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 신설
--

<빛 좋은 개살구 2>

2. 해수부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장밋빛만 가득한 허상!!

- 2018년 예산 집행률 82.1%에도 일자리는 목표대비 21.5%만 달성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라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등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일자리 라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음

○ 해수부 또한, 정부 기조에 맞춰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 초 국무총리 업무보고 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해 보고함

○ 해수부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해양수산분야 관련 일자리를 1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5대 분야에 5개 단위 사업과 4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호들갑을 떨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을 볼 때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듦

※ 2018년 7월까지의 집행실적 분석

※ 어촌뉴딜 300을 제외한 14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을 분석

① 올해 목표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은 목표 대비 21.5%에 불과

○ 올해 7월까지 일자리 창출은 28,982명이지만 실제 창출 인원은 6,232명으로 목표의 21.5%만 달성함

- 전체의 64.5%, 18,752명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12개 세부사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단 1명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 목표 대비 실적이 70% 미만인 세부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평균 41.4%에 불과하며(6,556명 목표/2,714명 채용)
- 80%이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은 12개 사업이지만, 이들 사업의 평균은 95.8%에 불과함(3,674명 목표/3,518명 채용)

② 예산 집행률 82.1% VS 일자리 창출 21.0%..재정 투입 효과 없어

-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29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2.1%에 달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21.0%인데 심각성이 있는데,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올해 7월까지 투입 예산은 2조8,269억원이며, 집행액은 2조3,218억원 집행률은 82.1%로 올해 예산 집행이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 올해 목표한 일자리 창출 27,546명과 비교하여 실제 창출된 인원은 5,773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은 21.0%에 불과함
- 예산 집행이 100% 완료된 11개 사업의 일자리 창출은 63.5%에 불과하며, 계획에는 없었지만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겨우 목표 대비 22.5%만 달성함

③ 실적 부풀리기, 산출 근거도 빈약한 사업도 있어

- 일자리 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빈약한 산출근거로 목표를 설정한 사업도 있음

- 마리나 사업 창업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표는 조사 인력 75명이지만, 이들의 활동기간은 단 4개월에 불과한데 해수부가 생각하는 일자리가 어느 수준인지 안타까운 마음임
 - 수중레저 창업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에도 해수부 실적으로 은근슬쩍 둔갑해 놓았고,
 - 센터당 4명을 채용하면 24명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목표는 13명으로 하여 결국은 184%를 달성했다고 함
 - 고용률에 대한 산식이 맞는지, 어떠한 근거로 산출 근거를 삼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업들도 있음
- ☞ 장관께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신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데, 22년까지 일자리 14만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 ☞ 해수부는 답변 자료에서 정책환경 변화와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유동적이라 답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빠져 나 갈 구멍을 만드는 것인가?
- ☞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유례 없는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책임 주체인 정부가 허술하게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임
- ☞ 종감 전까지 세부 사업별 이행 방안과 월별 이행점검계획을 제출하시고,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내년 업무보고에서 그 과실을 따지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표1) 해양수산 분야 세부 일자리 창출 계획(안)('18~'22)

분야	단위 사업	세부 사업	'18	'19	'20	'21	'22	계
해운항만 물류업	4	8	987	1,418	1,831	1,618	1,489	4,248
항만 건설업	2	5	6,460	3,763	8,361	1,698	15,574	35,856
수산업	4	13	2,833	3,076	3,365	4,096	3,610	9,291
해양산업	4	14	18,702	6,953	8,111	4,412	7,699	45,877
어촌뉴딜 300	1	1	-	3,240	9,489	12,961	9,027	34,717
5	15	41	28,982	18,450	31,157	24,785	37,399	140,773

(그림1)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청와대)



<빛 좋은 개살구 3>

3.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채질하는 수산업경영인사업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장년층을 발굴·지원하여 어촌 정착을 도와 어촌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 3단계 구분(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18예산 2,300억원
- 해수부는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 답변 자료에서
 - '어촌 어가인구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과,
 - '신규수산업경영인 연령은 30대 이하가 절반 가까이 되어 고령화 심화를 해소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함
- 하지만, 해수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어가와 어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는 심화되고, 청년 어민은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어가수는 2014년과 비교하여 3.6%가 감소하였으며, 어가 인구는 5.2%가 감소함
- 이 와는 반대로,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어가 인구는 9.4%가 증가함
-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어가의 이탈율은 더욱 심각한데, 2015년과 비교해서 무려 13.4%가 급감함
 - 실제 2015년 이 후 30대 이하 지원 비율은 47.7%에 이르지만, 어촌 이탈을 막거나 유인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임

- 현재 우리 어촌은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립 자체를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현재의 청년 영어정착자금지원과 단순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 ☞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해수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의 계획은?
- ☞ 단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어촌산업의 영역으로의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어촌 환경의 변화, 수산업 경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7, '14 증감율
어가수	54,793	53,221	52,808	△3.6%
어가인구	128,352	125,660	121,734	△5.2%
30대(39세이하)	26,681	26,020	23,102	△13.4%
65세 이상	39,113	40,871	42,504	9.4%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은 총 3단계로 구성

어업인후계자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전업경영인	만 55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선도우수경영인	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및 ②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연이율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리 차액을 지원

- 2014년 인원 1,000명 배정금액 약 620억에서
2018년 인원 1,358명 배정금액 약 2,300으로 증가

<공공기관 해부 1 : 캠퍼더 인사>

4. 비전문가를 밀실 평가로 ‘캠퍼더’ 낙하산 인사

-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이지만, 최근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한 상황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운 재건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이 4개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5개 기관의 임원 9명 중 4명(44%)이 캠퍼더이며, 전문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제대로 된 해운 재건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 ① 이번에 파악한 4명은 전형적인 캠퍼더 인사임
 - A공사의 사장은 “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부울경 경제 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20대 총선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18대 대선 부산공동선대위원장”, “담쟁이포럼 부산 지역 공동대표”, “담쟁이교수모임 부산지역 대표” 등 임
 - ※ 김영춘 장관 : 민주당 18대 대선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활동
 - 또한, 2014년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선거 벽보에는 “문재인의 친구, 경제학 박사”, “사상 최강의 콤비! 황호선과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음
 - B공사의 사장은 당시 문재인 후보 캠퍼(더문캠) 부산선대위가 발족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며

- **B공사의 본부장**은 “희망연대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참여정부 해수부장관 정책보좌관”, “노무현재단 부산위원회 운영위원장” 출신으로,
 - 또한, 2008년 A공사의 자회사 임원에 청와대내 부산출신 386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내정된 것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정권말기 제식구 챙기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거센 반발과 내정 취소 요구에 직면했던 인물임
 - **C공사의 부사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 광역의원 출마”, “송영길 시장 재직시 인천시 도시재생특별 보좌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실장”의 경력이 있음
- ② 일부에선 해당분야 전문가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A공사 사장의 경우** 국제금융 전문가라고 제출한 논문(6편)은 경제 위기에 따른 정치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것이고, 글로벌 무역 전문가의 논문(6편)은 가격 결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3편의 논문은 초록이 비슷한 새로운 연구가 아님
 - 채용 서류에도 본인 업적을 얘기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 소개서 47줄 중에서 무려 20줄을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일조한 내용으로 지원서를 제출함
 - **B공사 본부장**은,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전체 경력이 30개월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민원을 담당한 장관 정책보좌관 18개월과 A공사 자회사 경력 12개월이 전부임

- 지원서류에도 관련분야 논문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 업적,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포상실적란에 단 한줄도 기재하지 못했음
- C공사 부사장은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분야 논문·연구실적 등 기타 업적에 “도시재생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출품”, “친일재산 국가 귀속” 등의 내용을 기재함
 - 관련분야 특허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에는 일본인 토지 국가 귀속을 기재하는 등 관련분야와 전혀 동떨어진 사항들을 기재하였는데 자질이 의심스럽고 평가가 된 게 신기함
- ③ 채용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밀실 평가를 통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B공사 본부장은 서류 평가에서 8명 중 6등을 하였지만, 면접 평가에서 2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B공사 사장이 임명을 하였는데, 서류와 면접 모두 1등인 후보자는 탈락함(심사위원 동일)
 - 특히, 지원서에는 경력이 2개 밖에 없었는데, 사장에게 제출한 추천의결서에는 경력 2개와 함께 “희망연대 운영 위원장”이라는 경력이 추가되어 제출됨
 - C공사 부사장은 서류평가에서 5명 중 3등을 하였지만, 면접 평가에서 2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C공사 사장이 임명하였는데, 이때로 모두 1등인 후보자는 탈락함(심사위원 동일)

- 특이한 점은 캠코더는 아니지만, D공사 본부장도 면접 평가에서 2등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임명된 것을 볼 때, 항만공사 임원이 되려면 절대 면접에서 1등을 하면 안되는 것임
- ☞ 해운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전문가를 밀실 평가를 통해 캠코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장관께서 직접 임명한 사장들, 이 사장들이 임명한 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라 보시는가?
- ☞ 해수부 차원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 바람

	임원수	문재인정부임명	캠코더	캠코더비율
부산항만공사	4	2	2	100%
인천항만공사	4	3	1	33%
울산항만공사	3	2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3	0	0	0%
한국해양진흥공사	2	2	1	50%
	16	9	4	44%

<공공기관 해부 2 : 국정과제 부재>

5. 방향 잃은 공공기관..국정과제 수행기관인지 알지 못해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는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됨
- 모든 정부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국정과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역별 토론회도 개최함
 - 즉, 해수부는 공공기관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임무를 부여해야 하고, 기관은 중장기 전략과 추진 목표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함
- 해수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3개, 실천과제는 18개, 세부사업은 67개이며, 이를 이행하는 기관은 9개 기관에 30개 세부사업임
- 하지만, 기관별로 국정과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한심하기 짝이 없고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임
- 해수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국정과제 세부사업 현황과 기관에서 제출한 국정과제 세부사업 내역이 일치하는 공공기관은 9개 기관 중 단 1곳도 없음

- 4개 기관은 해수부가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4개 기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함
- 나머지 5개 기관 또한 해수부가 제출한 세부사업과 일치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는데, 1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36개 사업을 수행한다고 답변한 기관도 있었음
- 해수부 산하 주요 20개 기관 중에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국정과제와 임무를 모르는 9개 기관보다 더 한심한 것은 국정과제 세부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임
- 11개 기관에는 국정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으로, 결국 해수부 국정과제 이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불과한 것임
-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임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수부가 국정과제를 공유하지 않는데 그 책임과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급하게 국정과제를 만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 ☞ 해수부가 임무 부여를 잘못된 것인지, 기관들이 본인들의 국정과제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현황을 파악하여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보고 바람

<공공기관 해부 4 : 법인카드 사용 현황>

**6. 지침 위반하여 법인카드 사용 230건에 3,230만원!
주차비 등 개인 불일에 법인카드 사용한 공공기관 임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클린카드를 원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② 관할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③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의 3가지 경우임

○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총 239건에 3,230만원에 이룸

- ▲휴일 사용은 79건 1,270만원, ▲관외 사용은 141건에 1,700만원, ▲심야 사용은 19건에 250만원임

※ 2017년~2018년 8월까지 기관별 임원의 법인카드 내역 확인

※ 기관은 한국선급을 제외한 19개 기관 대상

○ 물론, 모든 건이 위반한 것은 아니며, 지침에 있는 예외 규정에 따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소명되는 건도 있었음

※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하지만 임원이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최종 결재권자가 부장인데,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임

- 실제 소명서에 “000 업무 협의”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 결의됨

☞ 장관께서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한 클린카드 내역과 소명을 확인하신 후, 소명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집행한 건이 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

○ 법인 카드를 쪼개기한 내역이 발견됨(7개 기관, 12건)

○ 통상적으로 금액이 과하게 나오거나,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 대부분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함

- 하지만 모 기관은 선결제 식당 특성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인 5분 후에 2번째 결제를 하고, 30분 동안 3번의 추가 결제를 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은 떨어짐

- 또 다른 기관은 회센터 특징상 주문을 하고 나중에 식당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명했지만, 제일 나중에 결제되어야 식당에서 제일 먼저 결제를 함

○ 또한, 공공기관 임원들은 개인적 용무로 지출해야할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소한 지출에 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함

1) 모 기관의 임원은 대학원 야간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포장마차나 수제 맥주집에서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함(총6건, 23시 이후 결제 2건)

2) 모 기관의 임원은 개인적인 용무로 종교시설에 다니면서 주차비 지급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3) 회사와 자택이 서로 다른 모 기관의 임원은 자택에 도착하는 날 개인적 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지출하고, 지택으로 올 때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받은 정황도 확인됨
 - 4) 식사 후에는 꼭 카페에 가서 만원 정도의 커피를 법인카드로 결제함. 부하 직원들은 제 돈 내고 커피 마시는데 임원들의 이러한 카드 사용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5) 모 기관은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공직 유관단체에서 할 말은 아니며, 현충일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은 국민과 어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임
-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봄
- ☞ 법인카드 사용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고,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 관련 사항에 대해 의원실로 보고 바람

<여성 권리 신장 1 : 유리천장 타파>

7.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 탈피해야..여성 권리 신장 필요

- 대통령과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임
 - 2017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해 2018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6.5%, 본부 4급 이상 과장급에 여성을 15.7% 임명한다고 했음('22까지 10%, 21%까지 상향)
 - 지난 3월19일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말함
- 하지만, 해수부와 해경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부의 약속과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유리 천장이 존재함. 당장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못 채우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임
 - 해수부의 경우 정무직(장차관)의 경우 0%,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여성은 단 1명으로 2.7%에 불과하고, 4급 이상 여성은 12명으로 161명에 비해 겨우 7.4%에 불과함
 - 해경의 경우도 경무관급 이상에 여성은 단 1명도 없으며, 총경(과장급) 계급에 단 1명만의 여성이 존재함(1.5%)
- 한술 더 떠 해수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하달 받았음에도 의원실에서 지침 하달 여부를 물었더니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함

- 자료를 제출한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고 더 큰 유리 천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관장이 여성인 기관은 단 1개 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2017년에 들어서야 임명됨
 - 상임임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여성 임원이 없는데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5년부터 계속된 상황임
 - 관리직의 경우, 한명도 없는 기관은 3개이며, 여성이 관리직에 임명된 것은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임
- ☞ 유리 천장을 깰려는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가?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 이러한 관리직 이상의 직원이 대부분 남자이다보니 여성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보건휴가 사용이 가능함에도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음
 - 2018년 사용 비율은 해수부 7.1%, 해경 2.7%이며, 산하기관들은 1건도 없는 기관은 12개이며, 그나마 사용한 기관들의 비율도 5% 정도에 불과함
- ☞ 유리 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함.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여성 권리 신장 2 : 여성어업인 지원>

8. 여성어업인까지 농업에 차별 대우..전담부서 설치 필요

- 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어업인수는 61,144명으로 전체 어업인(121,734명)중에서 약 50%를 차지함
- 하지만 전체 어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어업인은 많아 졌지만, 농업과 비교하여 조직, 예산, 규모면에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농림부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지만, 해수부에는 존재하지 않음
 - 농림부는 독립된 과 조직인 “농촌복지여성과”를 최근 신설하여 전담인력 8명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 해수부는 전담 조직 없이 소득복지과의 2명이 수산복지인력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성어업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결국 여성어업인까지 농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
- 또한 정부 지원 예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해수부 예산으로는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울 것임
 - 농림부는 예산 사업(7개 사업에 30억5천만원)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하지만, 해수부는 겨우 1억원에 불과한 돈을 예산사업이 아닌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함

○ 또한, 관련 단체의 규모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남

- 2016년에 창립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54개 분회, 8,208명으로 구성되고, 예산은 정부보조 1억원과 수협 지원금 7억원 등 8억원이 살림살이의 전부임
- 1996년에 창립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회원수가 7만명이 넘으며, 농림부와 농진청 등에서 인가해 준 단체만 5개이고, 교육,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임

○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왔음. 농림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최근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한 정책 배려를 우선함

☞ 여성어업인 전담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여성어업인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봄. 견해와 계획은?

☞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로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람

구분	여성어업인	여성농업인
담당조직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인력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인력	2명(사무관 1, 주무관 1)	8명(과장 외 7명)
주요업무	<소득복지과 주요업무> - 수산기술지도의 기획·총괄 - 수협 공제업무 지도·감독 - 수산직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 - 수산기반정도 관리 및 시스템 - 수산복지인력업무	<농촌복지여성과 주요업무> -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 농촌 여성에 관한 사항 총괄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촌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성별 영향평가 관리 업무 등

9. 유명무실 원산지표시위반 공익신고, 허위신고가 절반

-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표시,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
-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있음
-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를 분석해본 결과 절반가까이 허위신고였으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또한 미비한 수준임
 -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공익신고건수 517건 중 허위 신고는 244건으로 약 47.2%에 달하며,
 - 조치건수 273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4건으로 5.1%뿐이며 지급 금액도 705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이로 볼 때 포상금 제도는 유명무실함
- 더 큰 문제로는 이 신고제도가 파파라치를 양성할뿐더러, 행정손실의 원인이 됨
- 신고자를 분석해 봤을 때 28명이 중복적으로 신고하고 있음
 - 28명이 신고한 건수는 91건이며 이 중 39건이 허위신고로 그 비율은 42.9%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건이며, 총 155만원임

- 이 중 한 사람은 2018년 5월 25일 강원도 지역에서는 11건의 신고를 했지만 모두 허위신고로 결론이 남
- 신고를 받으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의 지원장이 조사공무원 2명을 지명하여 현장출동 하도록 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14개 지원을 운영 중이고, 부산, 인천, 인천공항 지원을 제외하면 각 지원 직원은 5명~10명이며, 8개의 지원은 하나의 광역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음 * 서울, 경기, 충청, 전북, 제주, 경남, 경북, 강원
- 만일, 각 지원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요 시간만 만나질이 걸리고, 허위신고일 경우 행정손실이 불가피함
- ☞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만 하고 있는 신고제도와 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신고와 포상금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업무과중과 행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 ☞ 신고제도와 포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어 악성 파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구분	신고건수	조치 건수	조치 비율	허위 신고	허위 신고비율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비율	포상금 지급금액
2016	184	88	47.8%	86	52.2%	7	8.0%	3,400,000
2017	187	103	55.1%	84	44.9%	6	5.8%	3,600,000
2018.8	146	82	56.2%	64	43.8%	1	1.2%	50,000
총계	517	273	52.8%	244	47.2%	14	5.1%	7,050,000